

LTE 기술, 철도에... SKT 인천지하철에 '전용 무선망'

SKT-인천시 'LTE-R' 구축 맞손 관제실·역무원 등 정보교류 수월 안전성 향상, 재난상황 신속 대응 내년까지 1·2호선 전체 설치 목표

SK텔레콤이 인천도시철도 철도통합 무선통신서비스(LTE-R)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1월 29일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철도 송도랜드마크시티역 LTE-R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TE-R이란 LTE 기술을 철도에 적용해 개발한 무선통신시스템이다. 음성, 영상, 데이터 등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측은 인천1호선(연장 29.4km, 29개 정거장, 총 34편성)



SK텔레콤 직원이 지난 2017년 LTE-R을 구축한 김포도시철도에서 영상 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SKT

과 인천2호선(연장 29.1km, 27개 정거장, 총 37편성)에 구축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음성 위주의 통신시스템(VHF) 대신 LTE-R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LTE-R을 적용하면,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 영상 전송, 그룹통화,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제실, 기관사, 역무원, 구조요

원 등이 동시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지하철 운행 안전성·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먼저 인천 1·2호선 전체를 아우르는 LTE-R 주제어장치(EPC)를 포함, 센터 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 중앙관제실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국제업무지구(송도6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송도7역) 본선 구간에는 LTE-R 송·수신 설비를 설치하고, 신설 정거장에는 LTE-R 관제 설비와 정거장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사업을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 수주로 지금까지 LTE-R 구축을 추진해 온 부산, 김포, 서울, 인천도시철도의 메인 센터 관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게 됐다. 현재까지 LTE-R 구축을 추진한 모든 전국

지자체에 메인 센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동사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은 올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LTE-R 사업 ▲군장산단 인입철도 외 4개 사업 고밀도과장분할다중화장치 구매설치 사업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LTE-R 사업을 수주해 구축 중이다. 최근에는 올해 최대 철도 통신망 사업인 '전라선 개량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 LTE-R 구매설치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도 선정됐다.

SK텔레콤 최일규 B2B사업단장은 "지하철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려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는 LTE-R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이동통신 기술력으로 LTE-R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책임자 처벌은 '빈칸'... 맹탕 대책에 비난

서울의료원 '태움' 대책 발표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과제 내놔 시민단체 '뜨거름 잡기' 분통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뜻의 '태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약 1년 만에 서울의료원이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과 간호사 지원전담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혁신 대책을 내놔다. 그러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책임자 처벌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맹탕 대책'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서울의료원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노무 강화, 전담노무사 배치, 임금체계 개편 등 5대 혁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운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시민사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료원은 이날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의료원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직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터 조성 ▲소통하는 일터를 위한 혁신적 조직·인사개편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 ▲고인 예우 추진 및 직원 심리치유 등 5대 혁신과제를 내놔다.

혁신안에 책임자 처벌이 빠졌다는 지적에 나뉠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9월 6일 진상대책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내놔다"며 "해당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위 조사 결과에 징계안이 포함돼 발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상대책위원회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자료가 있어 요청했는데 위원회가 진술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유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강경화 한림대 교수는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강경화 한림대 교수(왼쪽)와 양한웅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의료원이 내놓은 혁신 대책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분들이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왜냐면 누가 말했는지 알면 항상 응징을 해온 게 병원 조직이다. 이 문제로 저희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다. 진술자 보호 차원에서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경화 교수는 "개인정보가 없는 자료는 전부 제출했다. 서울의료원 진술자들 명단을 안 줘서 징계를 못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족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 조사과에서는 유족을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의료원은 우선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경력간호사 약 30명으로 구성된 '간호사 지원전담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선임 간호사의 업무 부담과 병가, 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고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지원한다.

평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근무표 개선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들은 병동·근무조·직종에 맞게 근무표를 개선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60명 인력 증원은 내년까지 완료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44명이 들어왔고 내년엔 16명이 총원인데 그걸로 되겠냐"며 "퇴사 인력에 대한 총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의료원 사직률은 37%에 달한다.

의료원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직무 분석을 통해 실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협의를 거쳐 출퇴근 시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마이너스 오프(인력부족으로 인한 휴일근무)로 주휴를 못 쉬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마이너스 오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정도인데 아무리 인력충원을 하면 뭐하나 사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마치 절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다. 심리,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감정노동보호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접수부터 처리와 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의료원은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을 신설해 조직 개편을 한다.

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간호부원장제도가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원장은 이사급이다. 이사숫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다 차있는 상태다. 이사를 한명 더 늘려달라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당장 못 한다고 해서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김장철 '불법 젓갈'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인천시 특사경 위생법 위반 30곳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앞두고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은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5개소는 입건,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 및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시민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달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3개소,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직업



김장철 젓갈류 판매업소 /인천시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알가공업체 2개소, 식용란 표시사항을 위반한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로 총 7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젓갈류 등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함에도 적발업소 중 27개소는 항·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서울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최우수상 '전동킥보드 활성화'

서울시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과제 13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이 찾아낸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의 우수과제를 뽑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과제는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를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제 개혁'이다. 제안자는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구역을 자전거 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별도 면허와 최고 속도 등 안전 기준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현

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다"고 평가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아이디어는 우수상을 받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카드의 발급 기준과 시스템을 통일·연계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다른 지자체 전입 시 카드가 자동 재발급되고 카드 혜택이 공유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수상자 13명에게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주고 우수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